

WTO 신분야분과회의 결과보고서

분과 간사 윤 창 인

I. 개최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5년 1월 27일, 오후 04시 30분 ~ 06시 00분
2. 장소 : KIEP 8층 소회의실

II. 참석자 및 발제

1. 분과회원: 박영우(환경부 국장), 유상희(동의대 교수), 황진택(삼성지구환경연구소), 이병욱(LG환경연구원), 이호생(명지대 교수), 김일중(동국대 교수), 임종수(광운대 교수), 최재철(외교부 심의관), 한택환(서경대 교수), 윤창인(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발표논문: 「21세기 국제 환경문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 발표자 : 최재철 심의관(외교부)
 - 토론자 : 박영우 국장(환경부)
 - 토론자 : 김일중 교수(동국대)

III. 발표 주요 내용

<간사의 모두 발언 및 논의>

간사: 환경외교 최전선에서 지난 13-14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재철 심의관이 이제 외교부에서는 환경부문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이처럼 오랫동안 환경부문에서 전문성을 갖고 근무한 예는 흔하지 않고 따라서 오늘 이처럼 환경 각 부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환경외교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는 의미가 있을 것임. 먼저 최심의관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60분 정도 발표하고 토론하기로 함.

발표자:

- 환경은 과거 자유재(free goods)에서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되다가 최근에는 범세계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 인식되고 있음.
- 산업혁명 이전에는 환경을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으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는 공업발달로 인한 공해물질의 배출을 초래,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서유럽, 일본 등 공업국에서 환경재난이 발생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환경이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인식이 대두됨. 1960년 후반 이후에는 북구 및 북미 대륙에서의 산성비 피해발생으로 환경이 한 국가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범세계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 인식되기 시작함. 결국 지구는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또는 차세대로부터 리스(lease)한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확산됨
- 지구환경문제의 현황과 이슈
 -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세척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CFCs=염화불화탄소)와 소화제(消火制)로 사용된 할론(halon)이 대기에 방출되어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을 파괴함.
 - 산업혁명이후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연평균 0.5%씩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역에 따라 0.3~0.6도 상승되었으며 2001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3차 분석보고서(TAR)는 향후 100년간 CO₂ 축적은 100%증가, 대기온도는 1.5℃~5.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 결과로 해수면 상승, 경작지 및 주거지 상실, 기상이변의 심화 및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예상
 - 중화학공장, 화력발전소 및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부식, 토양·하

천·호수의 산성화, 산림 및 농작물의 황폐화가 발생.

- 인간의 생산 및 소비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생물종의 서식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멸종에 이르게 함.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간 25,000개~50,000 종이 멸종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환경오염 속도가 계속될 경우, 현존 총 300만~1,000만 종의 생물종 중 10~20%가 향후 멸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결과로 생물자원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식량 및 약품사용 이익의 감소, 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를 예상함.
-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증가, 산성비 증가 및 무차별적 벌목활동으로 인해,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표면의 16%를 차지하던 열대림이 현재 약 7% 정도로 축소되었음. 이에 따라 생물종의 서식지 감소 및 생물종의 멸종,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저하로 인한 지구온난화 촉발
- 화학비료의 남용, 살충제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무절제한 경작방식과 산림의 남벌로 인한 토양의 생산성 감소 및 황폐화는 토양유실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사막화 현상을 초래하여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파괴 유발
- 핵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산업폐수, 생활폐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은 적조현상을 유발시켜 해양생태계 파괴, 어류 체내의 중금속 농축 등으로 인한 인간 건강을 위협
- 화공약품, 살충제, 비료 등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과 산업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유해 산업폐기물이 불법 또는 재활용의 명분으로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수출, 방출되어 환경 및 인간건강에 심각한 영향 초래

□ 지구환경문제의 특성

-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및 그 해결방안이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제한된 지구용량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경제·통상활동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역·환경 연계협상은 결국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역활동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하여야 하는가에 맞추어지고 있음.

□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 세계적 차원의 개발위주 경제성장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초국경성 지구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된 이래,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국제협약 및 WTO체제 등에서 다각도로 전개되어 왔음
- 유엔 체제하에서의 노력: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6.5 - 16, 스웨덴 스톡홀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 1984년 활동 개시), 유엔 환경개발회의 (1992.6.1 - 1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8.26 - 9.4,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국제환경규범 작성의 가속화

- 채택된 주요 국제환경협약 : 람사협약(1971), CITES(1973), 세계자연헌장 채택 (1982 : 현재·미래세대 이익을 위한 자연보존에 관한 국가 책임 선포), 브룬트란트 보고서 “Our Common Future” 발간 (1987 : 지속가능개발 개념제기),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1985)과 몬트리올의정서 (1987), 바젤협약(1989),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과 Agenda 21 채택(1992.6),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지구환경기금(GEF) 설립, 기후변화협약(1992)과 교토의정서(1997), 생물다양성협약(1992), 사막화방지협약(1994), 동북아환경협력: NEASPEC(1993), NOWPAP(1994), 양자환경협정체결(한일, 한중, 한러, 일중, 일러, 북중 등),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담 (1999), 2002.9 WSSD 요하네스버그선언문과 이행계획 채택, DDA (2001.11, 도하) 협상의제에 무역환경 포함, 바이오안전성의정서(2000), POPs 협약(2001)
- 주요 국제환경법 원칙: 지속가능개발원칙(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사용자 부담원칙(User Pays Principle)

□ 환경외교의 개념

○ 기존 외교는 각국이 영토·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었으나 환경외교는 제한된 지구환경 용량을 놓고 경쟁하는 것임.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책임과 비용분담 방안 논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환경용량 확보 경쟁(오존층, 해양, 기후변화 등)

□ 국제관계의 다원화 및 다양화

- 환경협상대상의 세분화 및 연계화, 지역협력의 강화, 국내·국제 NGO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다자외교로 발전
- 냉전체제 후 독립국가의 급증, EU 등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출현, 그리고 선진·개도국 내에서도 사안별 다른 입장 취하는 국가 그룹의 출현 등으로 인한 국별 이익의 다변화 및 지역 내 국가 이익의 공동화
- 주요 특정 국가그룹 : G-77/China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도국그룹, 선진국 그룹인 OECD, EU, JUSSCANNZ(OECD 국가 중 비EU국가 그룹) 및 러시아 등 동구권으로 구성되는 “시장경제전환국(EIT)”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 중국/인도/브라질, OPEC, AOSIS, LDC

□ 다자간 환경협상방식

- 구속력 있는 합의 추구여부에 따라 협상방식과 형식 상이함. 합의사항 결정은 대개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에 따름, 다자협상은 다수의 국가간 상충된 이익을 조정해 나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양자차원의 협상 수반하게 됨
- 협상은 최종단계에 가서는 core group을 형성, 논의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상결과 유도하기 위한 집중적 교섭을 벌이며, 협상 막바지에 이르면, 대부분의 경우 각종 미결사항을 전체적으로 나열하여 놓고, 주고받는 소위 일괄타결(package dealing)에 의한 합의 모색을 함

□ 무역과 환경 연계가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환경목적의 무역조치는 무역제한 효과를 초래하거나 자국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우리 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으로는 제품의 수출부진 및 선진국 시장에서의 접근 장애, 제품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우리제품의 무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

적 효과가 예상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환경제품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지의 시장개척이라는 긍정적 가능성도 있음

□ 대응방향

- 선진적 환경의식 정립, 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IV.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

Q: 최초의 환경외교 참여는 언제였나?

A: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 포함 제품 목록작성('91.6 나이로비 MOP-3)과 의정서 가입('92.2.27) 작업이었음. 이행위원회 위원('93-'94)으로 개도국 재분류('94.10 나이로비 MOP-6)작업을 추진하였고 1인당 0.3 킬로그램 사용을 초과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다자기금 납부면제 및 수혜자격 활용 자제하겠다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었음.

Q: 동북아 환경공동체 작업을 추진 배경과 내용은? OECD 및 WTO에서의 활동은?

A: 주요 작업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환경협력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었고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 및 3국 공동 조사('93), NOWPAP : 동해표기 문제('94.9), 제 1, 5, 9차 정부간회의이었음. OECD와 WTO 무역과 환경을 돌이켜 보면 OECD 무역환경공동작업반 의장단 일원으로 참여하였으며 OECD 지속가능발전작업과 각료원탁회의에 참여하였고 WTO 무역환경협상에 대표로 참여하였음.

Q: 한국외교의 시대적 변화상은?

A: '90년대 이전까지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로 처리되던 중 '90년대 조기 경보기능으로서의 환경외교 중요성 부각되었음. 2000년대의 환경외교는 방향성과 위상설정의 과정이었음. 예를 들면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 환경 NGO들의 높은 현실 참여 욕구(정치화), 선진국 문턱에서의 고민, bridging role의 위기(boundary state로 추락 우려)가 쟁점이었음. 현재의 상황은 참여자는 많으나 key player는 부족함.

Q: 향후 우리의 과제에 대한 고견은?

A: 환경과 지속발전을 패러다임으로 하는 신국제 질서 형성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환경기준과 성과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무역과 환경이 beyond DDA의 최대 협상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나아가 global environmental standard 지향문제와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과 영향 분석 요구됨. 환경외교의 목표는 비교적 분명하나 이행수단과 방법론은 미흡함.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보방안, 인적자원 양성이 시급하며 소극적·수동적 협상자세에서 탈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근시안적 협상 목표(예 :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를 탈피할 필요가 있음.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미흡, 극단적 입장, 우리 현실과의 괴리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협상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체제가 운용되어 다양성을 보완하고 균형된 시각을 가진 advisory group이 필요함.

V. 발표 원문: 별첨